여야, 세월호법 후속 작업 본격 착수

새누리, 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일괄처리 목표

새정치 "유족 원하는 특검후보 반드시 추천할 것"

세월호 특별법을 이달 말까지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여야는 2일부터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을 이달 내에 처리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의 후속 조치로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이 10월 말 완결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즉시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TF 구성과 관련해선 "그동안 협상을 주도해 온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 간사, 전문위원 등을 모시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세월호법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협력해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면서 "법안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여야 합의에 유가족 대책위원회 측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진정성과 정성을 다해 유가족의 입장이 세월호 특별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과 관련, "새누리당은 추후 논의가 필요한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시) 참여 사항을 당장이라도 논의하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번 협상 결과가 유족 전원이 100% 만족하지 못할 것이란 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당은 4명의 특검 후보군을 확정할 때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받게 할 것"이라며 "세월호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과 보상,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그날까지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승리의 축배를 들지 모르겠지만 참사의 진실은 가릴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의지를 버리지 않으면 진실은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유가족이 추천하는 후보를 우리당이 반드시 추천하게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양당 TF 간사로 활동한 홍일표 전해철 의원의 회동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원내대표의 협상 상대였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날 전격 사퇴함에 따라 후속 작업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합의안에 대한 유가족들의 반대 기류도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인데다 특별검사 추천과 수사 범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 보·배상 등을 놓고 여야와 유족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법이 10월말까지 별 탈없이 제정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 국감 증언대 세운다

해수부 장관·해경청장 등

김기춘 실장도 채택 가능성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4대강 사업 관련 인사들이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는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 채택을 하고 있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됐지만 국정감사에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정되는 만큼 세월호 증인·참고인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팽팽하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관련 인사들도 다수 증인대에 불려나올 전망이고, 전현직 대기업 경영진들도 하도급 비리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주요 증인과 참고인으로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농해수위 국감의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도 잇따른 인사실패에 더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증인으로 채택을 가능성이 커 세월호 참사는 국감장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 사업'이라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에 대한 명예회복 주장과 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곽장영 노조지부장은 미방위의 증인 명단에 올랐다.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과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도 국토위에서 4대강 사업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강물 수질조사를 위해 개발됐지만 '불량품' 판정을 받은 '로봇물고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류영선 연구원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권노갑 상임고문 회고록 '순명' 출간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최측근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이 최근 회고록 '순명(順命)'을 출간했다.

'순명'은 평생을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국민의 정부 초기 당시 여당 소장파들로부터 2선 후퇴를 요구받고 물러나면서 남긴 말이다.

권 고문은 지난 1999년 집필한 자서전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는 삶이 아름답다'를 2부로 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집필한 '진실은 하나다'를 1부로 엮어 이 책을 펴냈다.

권 고문은 이 책에서 자신이 평생 모셨던 DJ와의 관계에 대해서 술회했다.

그는 "영남 부모를 두었으나 호남에서 태어나 자란 내가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김대중 선생을 모시고 기나 긴 민주화 투쟁을 해오면서 평생을 시달렸던 것은 이 땅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이었다"며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김대중 선생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던 일이 내 일생에 가장 보람된 일로 남는다"고 썼다.

1930년생인 권 고문은 목포 출신으로 목포상고와 동국대를 나왔다. 권 고문은 지난해 8월 한국외국어대에서 최고령으로 영어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모교인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김동철, 광주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광주지역 '사회적경제 당사자 네트워크'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에너지 공공기관 간 간담회를 개최, 광주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의 주재 하에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나정승 광주권역 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등 광주 사회적기업 대표 6명과 한전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구매 총괄책임자들이 참여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사회적기업·자활기업·장애인기업·새터민기업) 물품구매 총액이 4조2800억원에 달하고, 63층 규모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청소용역 역시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담하는 등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주승용, 서훈 취소 훈·포장 미반납 제제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2일 서훈이 취소된 훈·포장 미반납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훈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이 취소된 경우 훈·포장과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서훈 취소대상 포상 406개 중 20%인 83개만이 환수됐다. 이는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 고의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보국훈장 5개 등 총 11개 훈장의 서훈이 12·12와 5·18 관련 죄로 취소됐으나 아직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박주선 "문화재청 마일리지 안써 수천만원 예산 낭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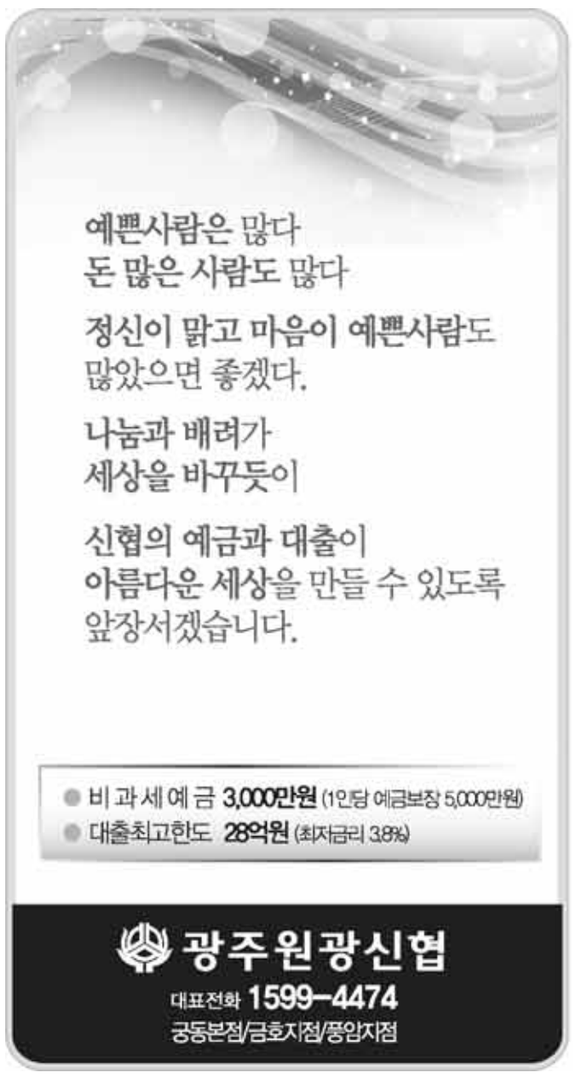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2일 문화재청이 공무상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108여 차례에 걸쳐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아 4600여만원의 국내외 출장 항공료를 불필요하게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공무 항공마일리지만 170만 마일리지가 넘는다. 누적된 개인별 공무 마일리지를 살펴보면, 최대 14만 마일리지를 넘는 직원부터 3만 마일리지 이상인 직원도 22명이나 됐다. 박 의원은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사적 소유물이 아닌 국가 재산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사용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광주 남구 숙원사업 잇단 예산 확보 성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특별교부금(특교)과 예산 확보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시 남구의 숙원사업을 차례로 해결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우선 봉선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특교 7억원, 송화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5억원 예산을 각각 확보했다. 또 진제초교 통학로 보수를 위해 재해특교 2억5000만원, 대촌지구 수로정비를 위해 예산 9억원을 각각 챙겼다.

봉선1동 주민센터의 경우 준공 후 22년이 지난 노후건물이나 어려운 구 재정 상황으로 신축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장 의원은 "남구는 지역의 절반 이상이 농촌과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등 상대적으로 주민 편의와 안전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별교부금과 예산 확보 필요성을 설명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